

# 野5당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與 압박

### 대법원장 4인 추천후 野 2인 압축...야당에 재추천 요구권 부여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서 빠져...민주,尹 거부시 국조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혁신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과 함께 이런 내용의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에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야당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이번에는 '제3자 추천' 방식을 가미해 또 다른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이 차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야당이 갖도록 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특검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넣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한 뒤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단독 의결과 윤 대통령이 재요구권(거부권)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 명분은 그만큼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전진숙 "의료기관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 국회의원은 3일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중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 질 평가 평



가포털 운영·관리체계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와 아동·분만 병원 운영평가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평가 등은 지정 결과만 공개하고 세부 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는 취지의 법안이다.

/오광록 기자 kroh@

### 문금주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절차 간소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3일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위장하는 수사를 허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를 도입했다.

위장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



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한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한 승인절차 문제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지속적으로 네티즌과 아이들을 변경하며 계림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영광군수 10·16 재선거 장세일 민주당 후보 확정

곡성은 6~7일 100% 국민 경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10·16 재보궐선거 전남 영광군수 후보로 장세일(사진) 전 전남도위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이동권·장기소 후보와의 3인 경선에서 두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영광군수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 권리당원 50%로 진행됐다.

민주당 곡성군수 후보 경선은 오는 6~7일 100%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였던 조상래 전 전남도의원의 복당을 결정해 재선거 예비후보를 강대광·유근기·정환태 등 4명으로 늘렸다.

무소속 후보 복당에 이어 경선 규칙마저 영광군(당원 50%·국민 50%)과 달리 국민경선으로 결정하자 경쟁 후보들이 탈당과 후보 단일화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해나 기자 khn@

### 의료 현장 간 한동훈 '해법' 찾을까

의료진 목소리 청취...의대 증원 중재안 관철 동력 확보·타협점 모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갈등으로 발생한 응급의료 차질을 해결해 보고자 적극적인 현장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겠다는 취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한 자신의 '2026년도 증원 유예' 중재안을 관철하기 위해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당 관계자는 3일 한 대표가 당분간 의료기관을 추가로 방문하거나, 의료계 종사자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전남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고, 최근 여당 의원, 장·차관, 당 소속 지지체장들도 전국의 응급의료 현장 점검에 동참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을 설득할 '반대 논거'를 제시하겠다는 뜻도 담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실제로 과장됐고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

인했는데, 한 대표는 기자회견 당일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 보시라"고 한 만큼, 직접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 보겠다는 게 한 대표의 생각이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의 중재안을 (정부가)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결국 '우리는 지금 그럴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정부에) '상황이 이렇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 여러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처럼 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의료계와 접촉해 타협점을 모색할 방침이다.

일단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1509명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계속 반발이 있는데, 야당 대표가 거기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하면 국민이 상당히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